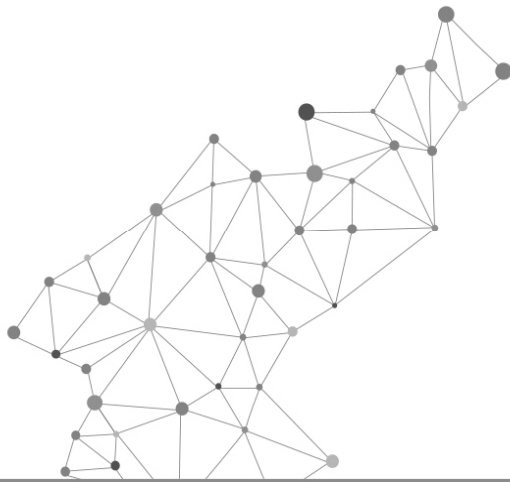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중국의 대미 전략과 한반도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중국의 대미 전략과 한반도

미중간 대립과 갈등 상황은 한반도에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DI 북방경제실은 지난 8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10월 16일에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미중갈등과 관련된 중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더 플라자 비즈니스센터

사회

이석(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위원장)

토론

김흥규(아주대학교),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이석: 지금부터 미중갈등과 관련된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KDI북방경제실은 최근의 미중갈등이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현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중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좌담회를 시작으로 8월에는 미중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는 미중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 본 좌담회를 통해 크게 미중갈등에 대한 중국의 인식,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과거보다 확연히 강해진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대중압박이 강화되는 현상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두 갈래로 의견이 갈라진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지 트럼프 현상일 것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을 든다. 반면, 이 현상을 트럼프 행정부만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나아가 미국의 지식인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 등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미국의 국가전략이며,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정책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의 미중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희옥: 우선 미중관계에 대해 사건, 국면, 구조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다. 사건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2019년 코로나19 사태를 꼽을 수 있다. 국면으로는 미국의 11월 대선과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하고 있고,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사회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만들어 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미중 양국은 서로를 국면 돌파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해 보자.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가입시키고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시켜 길들이기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고, 미국은 모든 에너지를 중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려 했을 때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둬 놓친 셈이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나홀로 경제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제어를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냉전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 국력의 절반 이상을 추격해 온 국가는 없었다. 과거 소련도 미국 국력의 절반에 못 미쳤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2019년 말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는 각각 21조달러, 14조달러를 상회하면서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 명목 GDP의 3분의 2 수준까지(67%) 추격하였다. 만약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면 양국간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다. 즉 사건, 국면, 구조 등 양국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미중간에는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협력’의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 추세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아마 중국 자신은 당분간 여전히 미국의 종합국력을 추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강한 압박에는 국내정치를 고려해 응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먼저 미국의 질서에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행동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률: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각이다. 미중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2008년 이후 미국 발 경제위기와 중국의 가파른 상대적 부상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양국간 힘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갈등은 구조적인 것이고, 향후에도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원인으로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그중에서도 정치지도자 변수를 꼽을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 공산당 일당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이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상 고도성장의 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과연 무엇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미국대로 선거 민주주의의의 취약성, 인종갈등 등으로 체제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였고, 미중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과거 40년의 미중관계 역사를 돌아보면 현재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도 과거와 기본 패턴은 매우 유사하고 굉장히 익숙하다. 차이점은 압박의 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면서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정책을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단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대내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대선 이후의 미중관계는 지금보다는 긴장이 완화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중국의 체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권 및 내정 등 핵심이익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만약 중국의 체제, 이데올로기,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시진핑 체제의 특성상 중국도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 자세한 설명 감사드린다.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국내정치적 변수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하셨다. 중국도 이를 감안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제, 이데올로기, 핵심이익을 건드린다면 중국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 있다고 하셨다.



김홍규: 사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당시만 하더라도 양국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것 같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하여 미국의 이익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중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대하는 동시에 트럼프 일가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였다. 일정한 양보를 통해 높아진 미중갈등의 파고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미국 다루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오늘날처럼 상호의존이 심화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압박을 취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당시부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에게 향후 미중경

쟁에 대응할 중국의 복안에 대하여 물어봤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2018년 중반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을 할 것이며 미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보인다. 중국 내부적으로 미중 갈등을 두고 1) 전면적, 2) 구조적, 3) 장기적, 4) 격렬한 경쟁이 될 것이라는 정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같은 해 9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당교에서 한 연설에서 ‘100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의 국면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엄청난 혼란들이 존재하겠지만 중국은 단호히 맞설 것이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제 중국의 정세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중국은 정면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작전을 활용하여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2020년에 들어 이제는 점진적으로나마 대응을 하자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맹공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중국은 방역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든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관리의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중국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내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국회의에서 ‘지구전(持久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주목해야 한다. 물론 전면적인 갈등이나 충돌은 아니겠지만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복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대선 이후 새로운 화해 국면으로 이행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압박 또는 사실상 미중간 전면전이 펼쳐질 것인지 의견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이러한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린다.

이희옥: 개인적으로는 이미 미중 양국간 체제경쟁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 2019년 중국은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시진핑 국가 총서기 문장(“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을 실었는데 이는 6년 전인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연설내용이다. 이 연설은 본래 비공개였다가 6년이 지난 후 공개된 것으로 미중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흐름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중간 이데올로기 경쟁은 물론, 이데올로기 디커플링(decoupling)도 심화되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현재 중국의 일부 대학에 공산당선언 기념관을 만들어서 참관하게 하고 있고,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해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파들은 소위 ‘국제대순환론’을 제창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계기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미중갈등으로 인해 국제대순환의 고리가 막히면서 ‘국내대순환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대순환론’은 ‘국제대순환론’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국 내 시장을 활용해 일종의 자립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전략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은 ‘국제대순환론’이었다. 특히 중국처럼 큰 나라는 차관을 도입하는 형태로는 경제발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해외 직접투자 등을 유치했고 경제특별행정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흐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데는 중국의 자신감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문제와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국제대순환의 고리가 끊기게 되면 미중 양국은 이념과 제도, 규범과 담론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보다 민주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길을 갈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것이 담론력(discourse power)이다. 중국은 과거 오부의 담론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담론을 생산하고 이제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 ‘개방’과 같은 담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중국은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독자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생각, 다른 담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11월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수장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대하는 외교방식(manner)은 바뀔 수 있으나, 중국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방역 거버넌스 실패를 목도하였고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지,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은 정말 보편적 인권에 가까운지, 미국의 의회주의는 과연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지 등 근본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거버넌스가 안정되어 있고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이념화하고 정책과 제도로 정립하여 강화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관계에서 향후 이데올로기적 디커플링은 불가피하며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개인적으로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요즘 중국에서 “중국은 결코 구소련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도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미국이 과거 냉전시기 소련에게 했던 방식대로 이데올로기와 체제 압박을 통해 중국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중국은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니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추격해오는 일본의 경제성장을 저지했듯이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의도는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여 중국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켜 중국의 성장을 제어하려는 것이라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미국 민주당 정부가 아닌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도높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국내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중국내에 제기되고 있다. 좁게 보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국내 선거용, 좀 더 넓게 보면 미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중국 이슈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부른 거친 맞대응보다는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관망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사안은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의 금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밀리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명백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다. 시진핑 주석의 개인 권력과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작업이 대외적으로도 투사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이 가치와 이념을 대외관계에서도 투영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와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그 가치와 이념을 대외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는 않다.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에 ‘중화민족 부흥’, ‘중국의 꿈’, ‘중국 방식’을 많이 언급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방식’이 다른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오히려 각 국가들이 직면한 국내 상황에 따라 다른 발전방식을 추구할 수 있고, 세계는 서로 다른 문명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국 예외주의를 인정받고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른바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국가라 할 수는 없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가치외교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 비민주적 체제에 대해 공격할 때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미국의 가치외교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익 차원에서의 전략적 선택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대중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다른 그룹들이 정책형성에서 점차 대중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이 다루기 훨씬 어려운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자신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최근 백악관에서 나온 ‘대중국 보고서’와 폼페이오 장관의 닉슨 도서관 연설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에 대한 백악관 내 분파에 대해서는 상해 복단대의 우심보(吳心伯) 교수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의 대중정책에 대해 예상해 보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힘의 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므로 제도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대중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당시 부주석으로 바이든의 상대방이었다. 그 인연을 들어 대중정책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경파(hawkish)였다. 또 현재 미국의 여론을 보자면,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바이든은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중국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미국 조야의 전략가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 측 전략가들은 민주당 집권 당시 대중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흔들기에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이 이 기세를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민주당의 강점을 살린 정책들로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이석: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중국도 현 상황을 일종의 미중 체제경쟁, 체제 간의 격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의도에 대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점차 중국도 의도를 이해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섰다. 그리고 11월 대선 이후에도 미중 양국의 갈등이 완화된다기보다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희옥: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아마 중국은 누구보다도 11월 대선 이후의 미국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무관하게 양국간 이념과 체제 경쟁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1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선물을 제공해 주고 화해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1차 무역협상이 끝나고 아직 실행되지 않았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에 만족할 만한 선물을 안겨준다면 단기적으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보다 강화된 강경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주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환율, 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 사이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도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대로 협력의 공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후문제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민주당, 공화당과 상관없이 대만, 홍콩 문제는 이미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석: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중갈등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경제, 안보, 인권 등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기본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희옥: 냉전시기를 구성했던 핵심요소는 이데올로기 분절, 경제블록화, 군비경쟁 등이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을 이용하여 소련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면서 냉전을 형성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데올로기 문제는 중국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에 양보하기 어렵다. 어쩌면 중국의 체제, 제도 그리고 이념을 바꾸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 모른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블록화하는 것은 미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미국이 만든 판 위에서 단순히 하나의 행위자(actor)로서만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가치사슬 플러스 알파(china value chain + α) 또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형성한 블록을 약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군비경쟁의 경우 미중 양국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과의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화웨이, 틱톡 사례처럼 SMIC같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때 미중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동률: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트리플 트랙(triple track)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만약 중국에게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과 글로벌 슈퍼파워가 되는 것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공산당 체제 유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시진핑 정부에게는 공산당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중국의 부상이다. 따라서 공산당 체제 유지와 중국의 부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은 좀 의아스럽다. 그럴수록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역설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시진핑 주석이 퇴진한다고 공산당 체제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과도해 보인다.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공산당 체제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핵심이익에 대한 대응이다. 체제와 공산당에 대한 압박은 중국의 국내정치적 정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맞대응을 계속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등이 있다.

사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공세는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40년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줄곧 있어 왔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은 예상보다 강경하지 않고, 상당히 절제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때리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만이나 홍콩을 겨냥하고 있다.

공산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와 달리 반미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있는 듯하다. 중국에서 가장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환구시보 사설에서 “중국인들이 설령 미국의 대중정책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반중정서가 최고조인 상황임에도 중국인들의 반미정서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반중국 정서를 오히려 내부적으로 체제 지지와 결집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 같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내부 결집을 유도하고 힘을 키우자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점은 국제적으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나 반중국 연대가 강화되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막상 미국의 공세에 직면했을 때 우군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여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다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겨냥하고 다자협력을 주도해갈 경우 중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희옥: 덧붙여 보충드리겠다. 2019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다. 중국 일반 대중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1%, 중국 전문가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32%,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5%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떨어졌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피하는 데에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라는 중국의 목표가 훨씬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단일패권 체제로 형성된 국제관계를 다극화하고 함께 공존하자는 것이다.

김홍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요한 시장과 수요는 중국이 가장 크고 거대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공급 측면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미중간 6G를 향한 대경쟁이라든가 혹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신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협력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매우 복잡한 가치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미중 양국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화웨이 제재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였지 중국의 모든 기업의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이 성장하는 속도는 느려졌고 영향력 확대도 그만큼 어려워지겠지만 중국이 살아갈 공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에서 헨리 키신저가 제안한 공진화(供進化)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의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은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일종의 시장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석: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관해 여쭙고 싶다. 대표적으로 대만,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 등 각종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이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국이 말하는 소위 금도를 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과거보다 더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동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중공세가 강해진 데 비해 중국은 자제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내부적으로 대응 수단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내부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996년도에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로 군사충돌 직전의 위기상황까지 간 적도 있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이 1995년 모교인 코넬 대학에서 행사 참석을 빌미로 미국 방문 논란이 발단이 되어 양국간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도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 장관의 8월 대만 방문에 이어 9월에는 국무부 키스 크라크 경제담당 차관도 방문하였다. 대만과 단교이후 40여년 만에 최고위직 미국 관료가 대만을 연이어 공식 방문한 파격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대만과 대만의 지도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대해서는 무력시위를 하는 등 직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준수하라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외교 경로로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중국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의 UN 가입 시도 또는 독립선언, 미국과의 수교 등 대만을 주권국가화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면 경직된 시진핑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유연성을 상실하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대만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미중갈등의 전선이 여러 이슈로 확대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올해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86% 정도가 ‘나는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을 표시했고, 자신을 중국인으로만 여긴다는 응답자는 2%에 그쳤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다. 또 대만인들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

經中)’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때리기’를 하게되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중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 금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만에 대한 직접적 경고는 물론, 군사적 행동도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는 대만, 홍콩 문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신장,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졌다. 더구나 2001년 미국이 신장의 분리독립 운동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다시 독립투사(freedom fighter)라고 주장하며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있어 중국내부에서는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2008년의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오히려 중국내 한족을 더 결집시켰다. 중국 내에서는 인권문제보다는 한족과 분리 독립하려는 소수민족 간 갈등과 충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중국은 이들 문제를 내정간섭이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부당한 외압으로 규정하고 외압을 이겨내기 위한 인민들의 단결과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미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공산당 체제에 위협을 미칠 정도의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중국정부는 이미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 통제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있다.

이희옥: 중국은 대만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거나 핵심이익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반분열국가법’을 보면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응한 비평화적 방식의 대응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홍콩문제의 경우 핵심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해석 문제라고 본다. 일국양제는 중국 주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하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홍콩문제를 처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홍콩의 지전략적 가치가 변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100년 정도 지나면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해외투자 및 대륙으로 가는 통로로서 홍콩의 역할과 가치가 변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이 자국 기업에 홍콩에서 철수하라고 해도 현재 상품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는 점에서 탈홍콩 현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물론 미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쟁점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홍콩문제가 미중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는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신장 위구르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인들을 상대로 ‘위구르인들의 민족주의를 대민족(大民族)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한족화(漢族化)정책’을 추진하였다. 소수민족의 자치보다는 ‘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동화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중국 내의 문제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인권문제 관련하여 미국에 오는 것을 규제하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이 다녀오면 된다. 상부에 정책이 있으면 하부에 대책이 있는 법이고,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가 미중관계를 좌우하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티베트문제의 경우, 티베트의 군사지역과 변경지역은 잡거(雜居)와 세속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시위는 대부분 개인의 분신자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대규모 조직적 저항이 어려운 고립된 형태로 남게 되므로 미중관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핵심이익의 하나로 간주한 ‘발전권(발전할 권리)’에 강조하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발전권: 중국의 이념, 실천, 공헌’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발전할 권리를 핵심이익 수호라는 맥락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높아진 이유도 발전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발전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은 지금의 미중간 기술 패권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석: 두 분은 중국이 강조한 핵심이익의 문제가 이슈화되더라도 미중간 직접적인 격돌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것 같다.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다.

김홍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중국이 발전도상국으로서 핵심이익을 수호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이익을 규정하지 않았다. 2011년에 다이빙궈(戴秉国) 당시 중국 국무위원이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핵심이익(① 국가주권, ② 국가안전 또는 국가안보, ③ 영토보전 ④ 국가통일, ⑤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을 제시하였고,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이익으로 규정되었다. 사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전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모호한 형태로 남겨두었는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남중국해도 중국의 영토적 핵심이익의 문제가 되었고 중국이 훨씬 공세적으로 변하였다.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들은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터키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중국은 터키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최근에 중국과 터키 관계가 상당히 좋고 터키가 반테러 전선에 다시 동참하고 있어서 사실 중국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인권문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위신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인권 관련 이슈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방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정치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양을 제거한 작업이었다. 중국 스스로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민족국가 체제에서는 어느 국가도 홍콩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계가 대만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목계를 방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국방부 전략보고서에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마치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결별을 선언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국무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방부의 실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지 실수였을 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대만을 거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treaty ally(조약상 동맹국)”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ally’에 대만을 포함시켜서 결국 미국이 대만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였다.

중국은 2005년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고 유사시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린 것이다. 주권과 영토의 문제이므로 만약 미국이 대만문제로 압박을 지속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만 내에서 엄청난 변화가 감지된다. 대만 여야는 지난 10월 6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진당도 아닌 국민당 소속 의원이 결의안을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이 변한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한 것 같다. 문제는 대만경제가 중국에 거의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의 전략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대신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결국 대만이 살길은 중국과의 통합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콩 사태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대만내 분위기가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이 목계를 무시하고 대만을 마치 하나의 국가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카드로 활용할 의지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대만 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서 정치적인 독립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뇌관이라고 본다.

물론 중국은 대만문제로 군사적 대결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 대응을 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동이 급격하게 고조될 위험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남중국해보다는 동중국해, 특히 대만과 관련된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석: 그럼 이제는 미중갈등과 관련한 중국의 대주변국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겠다. 미중 갈등 관련하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궁금하다. 크게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해 여쭙겠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쿼드 플러스(Quad plus)’ 참여 등 동맹 강화와 각종 군사적 옵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와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등 중국 외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에 대한 것이 있겠다.

이희옥: 미중간 치열한 힘겨루기로 인해 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경고, 회유, 암묵적 제재, 명시적 보복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복 수위는 그 계기가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의 선택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인 선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우리나라의 삼성, SK하이닉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삼성,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도 있고 틈새의 기회요인도 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같은 경우가 훨씬 예민하다. 작년 초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일부 기지국 장비로 도입하였는데, 화웨이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로부터 사실상 장비 사용 중단을 권고받았다. LG유플러스가 이용하고 있는 화웨이 5G 장비들의 철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철거비용 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5G 기지국 장비는 기존 LTE 장비와의 연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가정책 또는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강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쿼드 플러스’에 참여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책이다. 만약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거나 한국에 중거리핵전력미사일(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을 배치할 경우 사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INF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NF 도입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을 선택함과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신호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공 미사일 기지는 북부전구에 상당부분 위치해 있고, INF는 그 전략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중국의 안보이익과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길 것이고, 이로 인한 반발 강도도 거셀 것으로 생각된다.

EPN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WTO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직 전략적 그림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처럼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하고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PN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고 한국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 수준과 반발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석: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국에도 그럴지 의문이다. 미중갈등 속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겠다.

이동률: 앞서 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중국은 한미동맹 자체는 이미 한국과 수교 당시에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자신의 안보이익을 현저히 훼손시키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드 사태의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INF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PN이나 WTO 개혁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만문제와 홍콩문제도 더 유의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홍콩문제를 두고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대중국외교에서 가치외교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것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출발부터 가치보다는 현실적 국익, 특히 경제이익에 기반을 둔 관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미국과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구태여 이를 확인하고,

부각시켜 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은 중국과의 수교 당시의 초심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미중간, 중국-대만 간 역사적으로 긴장이 확대될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이다. 자칫 관리다 되지 않을 경우나, 또는 우발적 충돌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군사 충돌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미중 양국 모두 어느 수준에서 관리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그동안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오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온 측면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대만의 독립 지향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홍규: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미중 양국 모두에 냉전적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민감하고 격렬한 반응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같다. 이는 우리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과거 북한을 겨냥한 동맹에서 중국을 겨냥한 동맹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그 새로운 의지를 실행에 옮기려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이 제안하는 쿼드 플러스, EPN 등 신규 다자 플랫폼이 다 냉전적 심리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국방개혁 2.0’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결국 對북한이 아닌 사실상 對중국 군사 견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 측면이 있다. 향후 한국이 미중 양국으로부터 더 강한 압박과 반발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희옥: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종종 여론이 정책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눕고 바람보다 풀이 먼저 일어나는 격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선택을 강요받는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정책 수립에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외교적 기술로 하나씩 개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패키지 딜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의 외교는 결국 남북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사안마다 우리 문제에 대한 중심성이 흔들리면서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우리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석: 오늘 미중갈등과 관련된 중국의 전략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예전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미국과 중국을 직접 비교한다는 생각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지정학, 지정학적으로 미중갈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일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혹자는 시간은 중국 편이다, 혹은 시간은 여전히 미국 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질문은 다음번 미국, 중국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금번 협의회를 마치겠다.